

유럽의 개발교육 전략, 사례, 현황과 한국의 과제

박수연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과장/개발교육 전문관)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목 차

I. 들어가며

1.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
2.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시민교육

II. 유럽과 개발교육

1. 하나의 유럽을 향한 움직임
2. 유럽 개발교육의 주요기관

III. 유럽의 개발교육 전략, 사례, 현황

1. 오스트리아(Austria)
2. 벨기에(Belgium)
3. 체코(Czech Republic)
4. 아일랜드(Ireland)
5. 룩셈부르크(Luxembourg)
6. 네덜란드(Netherlands)
7. 폴란드(Poland)
8. 포르투갈(Portugal)
9. 슬로바키아(Slovakia)

IV. 한국의 개발교육 현황과 과제

1. 교육 현황
2. 협력 현황
3. 예산 및 인력 현황

V. 제언

1. 개발교육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정책적 우선순위 강화
2.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개발교육 지원 자금 시스템 구축
3. 개발교육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4. 개발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방법의 다양화
5. 타 교육과의 연계 강화
6. 국제사회와의 개발교육 연대 구축

VI. 나가며

참고문헌

요약

극한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장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유럽은 자유주의의 이상을 가지고, 유럽연합(EU)을 설립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세계 어디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자유주의의 이상 아래 1945년 설립된 국제연합(UN)도 70여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 하에 2015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Global Goals이라고도 불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수립하였다. 본격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본 목표의 발족으로 글로벌시민(Global Citizens) 양성이 UN을 위시로 한 세계 교육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국가시민의 개념을 넘어 유럽시민의 개념을 현실화한 유럽은 선도적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을 시행해왔으며, 이의 뿌리가 된 교육이 바로 개발교육이다.

유럽은 1960년대부터 개발교육을 시행해왔으며, 2000년대 ODA 대폭 증액 및 EU 설립으로 인한 다문화 인구 증가시기에, 글로벌 이슈, 세계 상호연계 등을 배우는 것을 자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왔다. 지속적인 ODA 증액 및 이로 인한 전문 인력 양성 필요, 그리고 다문화 인구의 증가 등 2000년대 유럽과 판박이로 닮은 현재 대한민국에 개발교육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유럽 사례 및 한국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제언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시민교육, 유럽, 한국, 전략, 사례

I. 들어가며

2016년은 역설의 한해였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한계를 절실히 목도한 세계가 자유주의 국제정치의 토대 위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브레튼우즈기관들(Bretton Woods Institutions, BWIs)을 만들고, 선진국들이 자국 내에 개발원조기관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국제협력을 시작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진전되어 온 자유주의 이상의 정점을 찍은 일이자, 글로벌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체제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수립 후 첫해였던 2016년, 세계는 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라는 Brexit와 미국 제일주의를 외친 국수주의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 대통령 당선이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대대적인 회귀를 목도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는 SDGs 수립 후 첫해인 2016년에, SDGs 수립에 큰 역할을 했고 이의 막강한 지지자였던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수상하의 영국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하의 미국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거대한 두 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추구하던 프랑스의 EU 탈퇴라는 프렉시트(Frexit)는 다행히 임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당선으로 저지되었으나, 여전히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난민 유입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에 기인한 극우주의의 득세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세계 어디보다 SDGs 수립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왔으며, 유럽연합을 일구어 유럽시민(European citizens)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자유주의 국제정치의 성지였던 유럽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국수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어디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극적인 조우가 발생한 곳이 하나 더 있다. 바로 2017년의 대한민국이다. 2017년 9월 14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와 중국의 피아니스트 랑랑(Lang Lang)과 함께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2017 글로벌시민상(Global Citizen Awards)을 수상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본상은 아틀란틱 카운슬이 2010년부터 글로벌시민의식 구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여 주는 상으로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 글로벌시민의식과 민주주의 고양에 기여한 공로로 문 대통령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촛불혁명과 그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자유주의적 가치를, 현실주의와 국수주의로 치닫고 있는 서구권에 역으로 전파하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하지만, 같은 시점 한반도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현재의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 중인 분단국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즉,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동시에,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살아있는 표본임을 세계에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제국주의, 식민시대, 냉전을 모두 겪은, 현실주의 정치의 한가운데에 있는 대한민국이 통일이라는 과제를 푸는 데 필요한 것도 발상의 전환이다. 제1·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있는 현실주의 정치의 주역이었던 유럽이 EU라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꽃피운 것처럼, 현실주의의 삼엄한 현실 속의 대한민국이 분단과 냉전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중국에는 글로벌시민(global citizens)이라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세계에 역으로 전파할 수 있는 국가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가주의의 넘어선 유럽시민(European citizens)이라는 자유주의적 이상을 현실화한 유럽의 노력, 특별히 개발교육 혹은 글로벌시민교육으로 불리는 이 교육과 관련한 유럽의 사례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시민 양성을 위한 개발교육의 향후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수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참담한 결과를 목도한 세계가 인류의 공존·공영이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적 믿음 하에 실시하게 된 새로운 접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황폐화된 유럽 재건을 목적으로 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그 시작이었고, 유럽이 재건된 후에 초점은 제3세계로 향했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가 속해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의 전신은 마셜플랜 집행을 위해 1948년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였다 (박수연, 2015).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참담함과 자유주의 국제정치의 혜택을 고스란히 목도한 유럽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러한 면에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개발협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유럽 국가들이 제3세계의 현실을 자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일찍부터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한 영국은 이러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개발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가장

선도적으로 참여해왔다. 특별히 영국의 개발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하 NGO)인 옥스팜(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이하 Oxfam)은 1959년 개발 교육 담당 직원을 배정하는 등 일찍부터 개발교육을 시행해왔으며, 개발교육을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1970년대부터는 Oxfam 같은 개발 NGOs 외에도 버밍햄, 리즈 등 각 지역에 개발교육센터(Development Education Center, DEC)가 생기면서, 개발교육이 영국 각지에서 교육되기 시작했다 (박수연, 이상백, 2013).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은 1990년대 큰 변환기를 맞는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시작된 냉전의 종식, 인터넷을 비롯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가속도로 이루어진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그리고 이로 인해 증가한 세계상호연계성과 세계상호의존성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가중시켰다. 즉, 환경 파괴, 국제 분쟁, 양극화, 자본에 의한 세계화 등 더 이상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공조 하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고아라,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본격적으로 글로벌시민성(global citizenship)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 정부의 부패 문제, 개도국의 부채 및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구조 등 개발도상국의 본질적인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서구권의 국제 NGO들이 개발교육의 성격을 단순히 빈곤과 국제개발을 알리던 문자 그대로의 ‘개발교육’에서 전 지구적 연대와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글로벌시민교육’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시민교육 발전의 또 다른 주된 요인은 1993년 EU의 탄생이다. 이를 통해 EU 국가들은 개별국가의 시민권에 더해 유럽시민권(European citizenship)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럽 내에서 급속도로 증가한 이민으로 인해 기존의 국가 중심, 민족 중심적 교육에서의 탈피가 불가피해지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개발교육(글로벌시민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은 서구권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자금의 대대적인 증액이다. 냉전의 붕괴로 1990년대는 환경, 양성평등, 빈곤, 인구, 교육, 아동, 인권 지구촌 공동의 문제에 대해 협력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국제회의가 대폭 확대되어 개최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정점을 이룬 것이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수립이다 (박수연, 2015).

MDGs 수립을 전후로 OECD DAC 국가들은 대대적으로 ODA를 증액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 특별히 유럽 공여국 정부들이 집중한 것이 대국민 개발교육과 이해증진(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이하 DEAR) 분야였다. 당시 영국을 위시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ODA 증액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ODA백서(ODA White Paper) 발간 및 개발교육 지원 자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활동을 강화했다. 특별히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이 시기 발간한 ODA백서에서 자국민들이 해외원조 및 국제개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박수연, 2015, 박수연·이상백, 2013). 2007년 발간된 「개발에 대한 유럽합의: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의 기여(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란 합의서에서 EU 국가들은 개발교육이 글로벌 빈곤 문제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것만이 아닌, 자국민들의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합의서에서 EU가 밝히는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박수연, 2015).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의 목적은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쳐, 글로벌 개발 문제와 이에 대한 지역과 개인의 연관성을 알고 이해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영향을 미침으로, 상호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세계의 거주민으로서의 자신들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The aim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is to enable every person in Europe to have life-long access to opportunities to be aware of and to understand global development concern, and the local and personal relevance of those concerns, and to enact thei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inhabitants of an interdependent and changing world by affecting for a just and sustainable world.)” (DEEEP,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은 이 시기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자금을 대폭 확대해왔다. 영국의 경우, 1997년에 집권한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노동당(The Labor Party) 정부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를 창설하고, ODA를 대폭 확대하였다. 동 시기 토니 블레어 정부는 ODA 증액을 위한 대국민 지지를 위해 ‘개발을 위한 지지 구축(Building Support for Development)’이라는 개발교육 포함한 이해증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영국 정부는 1998/1999회계년도에서 2009/2010회계년도까지 이해증진에 약 1억1,600만 파운드 (한화 약 1,572억 원)를 사용하였다. 네덜란드 외교부의 경우는 네덜란드 공교육 내 글로벌시민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네덜란드 국제협력 및 지속가능개발 재단(Stichting Nationale Commissie voor Internationale Samenwerking en

Duurzame Ontwikkeling, 이하 NCDO)을 통해 연간 960만 유로 (한화 약 130억 원)를 공여한 바 있다 (박수연, 2015).

개발교육은 국제개발협력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개발원조의 질적 측면과도 직결된 분야로, 지속적인 ODA 증액이 필요한 한국의 상황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책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을 향한 노력에 힘입어,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ODA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보수당이 집권한 경우 ODA가 대폭 축소되거나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제가 폐지되곤 하였으나, 1990년대 말엽부터 대대적으로 시행되어온 개발교육의 영향으로 현재 개발원조와 개발교육은 초당파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2010년 집권한 보수적 성향의 연립내각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ODA/GNI 0.7% 달성의 목표 유지 및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제 유지 등이 지속되고 있다 (박수연, 2015). 룩셈부르크의 경우도 개발협력은 강력한 정치적 대중적 지원과 함께 정부의 주요한 우선순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ODA/GNI 1% 목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GENE, unpublished).

2.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시민교육

현재 유럽에서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등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유럽에서 본 교육은 공통적으로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이라는 용어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글로벌교육(global education), 글로벌학습(global learning), 그리고 글로벌시민교육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본 교육과 관련한 용어는 여전히 혼용되는 실정이다.

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EU 국가 내에서 본 교육의 조정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이하 GENE)의 경우, 개발교육,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글로벌개발교육(global development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education) 등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원조기관인 Irish Aid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개발교육이 성장·발전해 온 아일랜드는 여전히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으며, 영국은 개발교육과 글로벌학습을 혼용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교육부에서는 글로벌학습을, 정부원조기관인 오스트리아 개발청(Austrian Development Agency, 이하 ADA)는 개발교육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Oxfam 등의 개발 NGOs를 위시한 시민사회는 글로벌시민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IU)도 그 성격을 글로벌시민교육으로 변경하면서, 본질적으로 이러한 교육들 간에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도 기존의 환경 중심에서 SDGs와 같이 사회, 경제, 환경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진화하면서 본 교육들과 같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뿌리가 환경교육에 있고, 여전히 환경 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면에서 아직은 상기 교육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개발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만 보면, 개발이라는 협의의 개념만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 글로벌시민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옳으나, 현재 한국에서 글로벌교육은 국제 교류 및 개도국 협력을 위한 교육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혼돈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 및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이하 KCOC)에서는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 내에서도 긴 개발교육의 역사 및 양질의 교육으로 유명한 아일랜드가 개발교육이란 용어를 고집하고 있으며, 글로벌개발교육이라는 혼합 용어를 사용하는 체코 같은 국가들도 있다. 단 본 교육의 목적이 글로벌시민 양성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글로벌시민교육과 차이가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특별히 공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시민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글로벌시민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of global citizens 등 다양한 용어가 서구권 및 UN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지구촌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KOICA의 경우, 교육부를 위시한 공교육 현장에서 본 용어가 세계시민교육으로 통일된 것을 고려하여, 공교육 대상의 교육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단, ‘세계’라는 용어는

global이 아닌 world를 의미하고 있으며, 글로벌시민교육의 태생적 배경인 글로벌거버넌스의 의미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공교육 대상의 교육 외의 정책적 문서 등에서는 글로벌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럽 정부 차원, 구체적으로 GENE에서 활동 중인 유럽 국가의 교육 전략, 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용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글로벌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국내에서는 글로벌교육이란 용어가 다른 의미로 먼저 이해되고 있어, 이 때문에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개발교육이란 용어를 글로벌 교육, 글로벌학습, 글로벌개발교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한국의 개발교육의 경우 KOICA와 시민사회 모두 글로벌시민 양성을 교육의 주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성격이 글로벌시민교육과 차이가 없고, 마지막으로 UN에서 사용되는 글로벌시민교육의 배경이 개발교육에 그 근본적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글로벌시민교육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발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해외 국가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개발교육은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 일본, 미국 등의 나라에서도 활발히 시행 중이나, 본고에서는 유럽 국가에 한정하여 사례를 분석·적용할 예정이다.

제I장

개발
협력
이
슈

제II장

제III장

II. 유럽과 개발교육

1. 하나의 유럽을 향한 움직임

유럽은 태생적으로 글로벌시민교육이 탄생하고 성장·발전하기 좋은 환경이다. 지구상 유일하게 두 개의 시민권 개념을 현실화시킨 지역이기 때문이다.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개 국가의 시민권에 더해 유럽 시민권(European citizenship)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개개 국가의 시민인 동시에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글로벌시민(global citizens)이라는 두 개의 시민권 개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1946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스위스 취리히 연설에서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가 유럽에도 필요함을 주장하며, 하나의 유럽이라는 꿈을 천명하였다. 당시로서는 요원했던 ‘We must build a kind of 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이 꿈은 결국 1993년 EU의 탄생으로 현실화된다.¹⁾ 유럽은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출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창설, 그리고 1967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를 거쳐 1993년 EU가 탄생하게 된다.²⁾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falen)으로 탄생한 주권국가 체제를 뛰어 넘는 국가 간의 연합체라는 자유주의 정치의 이상이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유럽연합 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서도 발생한다. 유럽연방의 꿈을 꾸어 현재의 EU를 만드는 초석을 닦은 윈스턴 처칠의 나라 영국이 바로 EU를 탈퇴한 첫 번째 국가가 된 것이다. 비록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브렉시트(Brexit)로 그 동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럽은 처칠의 꿈대로 하나의 유럽을 완성해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의 이름 변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유럽 국가 중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등과 같은 국가들이 외교 부라는 이름 대신 외교 및 유럽부(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 이하 MFEA)

1) Jon Danzig, “Winston Churchill: A founder of the European Union” posted on “Ideasoneurope, IOE” blog (November 10th, 2013), available at <http://eu-rope.ideasoneurope.eu/2013/11/10/winston-churchill-a-founder-of-the-european-union> (접속일: 2017.09.17.).

2)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eu/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90 (접속일: 2017.09.17.).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유럽은 또 하나의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난민 및 IS 등 극단주의 무슬림 과격단체 및 그 추종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는 자유주의의 산실이자, 전 세계의 희망이 되어 온 유럽에 국수주의의 움직임일 일으키고 있다. 이는 분명히 EU에게는 위기일 수 있으나, 역으로 기존 EU가 국가시민(national citizens)이란 개념을 유럽시민(European citizens)으로 확대시켰다면,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해온 빈곤과 분쟁의 이유로 급증하는, 유럽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난민 문제와 테러의 위협은 이들 국가들이 유럽시민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시민(global citizen)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숙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2. 유럽 개발교육의 주요기관

앞선 제II장인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개발교육이 성장·발전해 온 배경을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유럽 차원에서 시행해 온 두 개의 핵심 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와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이하 GENE)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1)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유럽 개발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EC이다. EC는 EU 회원국들이 개발교육 역량 강화, 회원국 간 개발교육 관련 네트워크 증진, 우수 사례 공유를 지원하며, EU 국가들의 개발교육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C는 EU 회원국들을 위한 별도의 개발교육 자금 지원 체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이에 총 9,295만 유로 (한화 약 1,260억 원)를 공여하였다. 이 중 대표적 프로그램 중 하나는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이하 CoE)과 함께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개년 간 시행하는 ‘글로벌교육, 네트워킹, 대화를 통한 문화간 학습 교류(Intercultural, Learning Exchange through Global Education, Networking and Dialogue, iLEGEND)’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에 대한 집행은 North South Centre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체 예산은 133만 유로 (한화 약 18억 원)로 EU가 전체의 75%를, CoE가 15%를 분담하고 있다(GENE, un-published).

2) 유럽 개발교육 네트워크(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GENE)

유럽 개발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GENE이다. GENE은 유럽 25개국의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40여 개 외교부, 교육부, 정부원조기관, 개발교육 실시기관으로 이루어진 유럽 개발교육 협의체이다.³⁾ GENE은 유럽 국가들 안의 개발교육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상호 학습, 정책 연구, 국가전략 개발, 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GENE, 2015).

〈표 1〉 GENE 참여국가 및 기관

참여국가	참여기관
Austria(오스트리아)	Austrian Development Agency (ADA), Ministry of Education, KommEnt
Belgium(벨기에)	Federa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velopment Cooperation Division),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Cyprus(사이프러스)	Ministry of Education
Czech Republic(체코 공화국)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zech Development Agency
Denmark(덴마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Finland(핀란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ational Board of Education
France(프랑스)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AFD)
Greece(그리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Germany(독일)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ngagement Global
Ireland(아일랜드)	Irish A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talia(이탈리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Luxembourg(룩셈부르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tvia(라트비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ithuania(리투아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Netherlands(네덜란드)	NCD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Norway(노르웨이)	Norad, The RORG network
Portugal(포르투갈)	Instituto Camoes, Ministry of Education, CIDAC
Poland(폴란드)	Polish Ai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Romania(루마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Slovenia(슬로바니아)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weden(스웨덴)	Swedish Centre for Higher Education
Slovakia(슬로바키아)	Slovak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pain(스페인)	Agencia Espanola de Cooperacio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AECID)

3) 출처 : GENE available at <http://gene.eu/> (접속일: 2017.09.18.).

참여국가	참여기관
Switzerland(스위스)	Education21
영국(United Kingdom)	DFID

출처 : GENE 홈페이지 (<http://gene.eu>)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접속일: 2017.09.18.).

제 I 장

개발
협력
이슈

제 II 장

제 III 장

(1) 개발교육 동료평가(peer review)와 국별 보고서(national report)

OECD DAC 국가들은 각국의 개발정책 및 현황에 대해 서로 점검하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2002년 11월 15-17일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유럽 개발교육 회의에서 도출된 ‘마스트리히트 개발교육 선언’을 통해 유럽 개발교육 동료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OECD DAC의 동료평가와 별도로 개발교육 분야에 특화되어 실시되는 본 동료평가는 초창기에는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이 주도로 실시했다가, 현재는 GENE 사무국이 담당하고 있다. 동료평가를 위한 재정은 GENE 참여국 부처와 기관들의 공동지원(basket-funding)으로 이루어지고 있다(GENE, 2015).

현재까지 사이프러스(2004), 핀란드(2004), 네덜란드(2005), 오스트리아(2006), 체코 공화국(2008), 노르웨이(2009-2010), 폴란드(2009-2010), 슬로바키아(2014), 포르투갈(2014), 아일랜드(2015), 벨기에(2017)가 현재까지 동료평가 수검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각국의 개발교육 국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⁴⁾.

(2) GENE 원탁회의(Roundtable)

유럽 국가들은 매해 2번 개발교육 분야에 특화된 회의인 GENE 원탁회담(roundtable)을 실시하고 있다. 본 회의에는 GENE 회원국의 외교부, 교육부, 정부 원조기관 등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초청되며, GENE 회원국이 번갈아 가며 회의 주최국이 되어 GENE 사무국과 함께 회의를 개최한다. 본 회의에서는 주로 각국의 개발교육 관련 최근 동향과 예산 배정 상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증진하는 자리이며, 특별히 논의되어야 할 특정 주제를 놓고 각 회원국 대표단들이 공동의 논의를 시행하기도 한다. 특별히 주최국의 개발교육 관련한 설명과 기관 방문 등이 이루어지는 등 GENE 회원국 간 개발교육 공동 학습의 장으로 기능한다. 한국의 경우 2016년 35차 회의에 정부원조기관인 KOICA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 센터(한국 UNESCO측 대표로 참석)가 비유럽국가이자 비 GENE 회원국으로는 처음으로 본 회의에 초청받아 참여하여 한국의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4)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GENE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http://gene.eu> (접속일: 2017.09.18.).

(3)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는 2017년 처음 발족된 프로그램으로 유럽 국가들의 개발교육 혁신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참가자격은 EU 국가 및 EU 후보국(Alban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Montenegro and Serbia 등이다. 온라인 예선과 국제심사위원단(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의 심사, GENE 사무국과 GENE 이사회를 거쳐 최종 우승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5개의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당 1만 유로가 지원되며, 20-25개의 프로젝트의 내용은 책으로 출간되게 된다. KOICA는 본 대회에서 비유럽권 대표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⁵⁾

5)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GENE 홈페이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http://gene.eu/award/purpose> (접속일: 2017.09.18.).

III. 유럽의 개발교육 전략, 사례 및 현황

유럽은 국가마다 개발교육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양하나 주로 외교부, 교육부, 정부공여기관, 시민사회, UNESCO 각국 위원회, 지방정부가 주요 주체이며, 외교부, 교육부, 개발원조기관 등 각국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관들이 개발교육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교육 시행의 형태는 외교부 및 원조기관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을 비정규교육 분야의 개발교육을 확산하고, 역시 외교부 및 원조기관이 교육부와 협력하여 공교육 내의 개발교육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국가마다 경제 규모와 개발교육 시행 역사의 차이가 있어서 개발교육에 공여하는 규모도 차이가 있으나, 개발교육의 역사가 긴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벨기에 2,800만 유로, 핀란드 700만 유로, 아일랜드 340만 유로, 오스트리아 420만 유로, 룩셈부르크 235만 유로 등 비교적 높은 금액을 개발교육에 공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GENE, un-published).

후발주자인 체코 공화국 같은 경우, 개발교육 예산 규모는 크지 않으나, 개발교육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계획을 위해 부처 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갖는 등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체코 공교육 현장에서 개발이슈와 글로벌 이슈가 다루어지는 현황을 통계 수집하는 등의 혁신적인 방법도 주목할 만하다.

오스트리아나 폴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내의 개발교육 확산을 위해서 개발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 모습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참고할만한 모범적인 모습이다.

주제적인 면에서는 개발, 환경, 민주주의, 공정무역, 불평등, 세계상호연계, 지속가능발전, 대안적 경제, SDGs, 공정무역 등 다양하며, 개발교육(글로벌교육, 글로벌학습)은 이 모두를 포함하는 엄브렐라 개념(umbrella term)으로 활용된다. 유럽에서는 최근 급증한 난민과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극우파 정당의 득세 등의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난민, 이주, 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개발교육 분야의 신규 주제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GENE은 개발교육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개발교육 국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핀란드 등의 국가가 동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전 연구들이 주로 핵심적인 1~2개 국가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개발교육 관련 대표적인 사례와 전략, 형태를 공유하고, 여기에서 한국에 적용할 법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오스트리아(Austria)

오스트리아의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 global learning)의 주체는 개발교육 지원 자금을 집행하는 ADA, 공교육 내에서의 개발교육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부, 개발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및 평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KommEnt, 적극적으로 개발교육을 실시 중인 개발 NGOs인 Südwind Agency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개발교육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 오스트리아 개발교육 전략 그룹(Austria Strategy Group for Global Education)이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공교육 내에 개발교육적인 시야를 증진하고, 주류화하며,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6).

최근 오스트리아 개발교육과 관련한 특별한 활동으로는 ADA, 교육부, KommEnt가 협력하여 Alpen-Adria-Universität Klagenfurt에서 2015-2018 동안 실시 중인 글로벌시민교육 과정(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ourse)를 들 수 있다.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과 교사 교육으로 구성된 본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시민교육의 개념 및 현재의 이론적 담론, 그리고 자신들의 업무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GENE, un-published).

2. 벨기에(Belgium)

벨기에는 2015년에 실시된 OECD DAC 동료평가에서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분야에서 '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DGD)와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BTC)가 벨기에 시민사회와 전략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호평받은 바 있다. 이렇듯 시민사회는 벨기에 개발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전체 개발교육 예산의 80%가 시민사회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으며, 개발교육에 참여하는 기관은 80여 개에 이른다. 벨기에는 매년 개발교육 지원 자금을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하는데, 2015년의 경우 '식량안보'라는 주제를 제시하여 이 분야의 교육이 실시되도록 장려하였다(GENE 2016). 벨기에의 2015년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지원 자금 규모는 2,800만 유로(한화 약 379억 6,600만

원)로 전체 ODA의 1.63%를 공여하고 있다(GENE, un-published).

최근 벨기에 개발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로는 SDGs, 극우주의, 폭력적 극단주의, 경제·사회·문화적 차별, 이주, 디지털화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 벨기에 외교부에서 국제개발을 담당하는 Directorate General for Development가 벨기에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GENE, 2017).

3. 체코(Czech Republic)

체코는 개발교육명으로 글로벌개발교육을 사용하고 있다. 개발교육의 후발주자로 예산 규모는 2016, 2017 동일하게 55만5천 유로(한화 약 7억5,000만 원)를 배정하고 있어, 양적으로는 적지만, 2011-2015 개발교육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Global Development Education)을 수립하고, 2008년 개발교육 동료평가를 받는 등 개발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는 2017년부터 예산을 ‘순수한 개발교육’과 ‘일반 대중을 위한 이해증진’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나, 양적 규모에서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체코는 개발교육 국가전략의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처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 연구소 등이 본 교육과 관련한 자금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어, 외교부와 체코정부원조기관(CzDA)은 이들 기관 및 NGOs의 핵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체코 교육부 산하의 정부 기관인 ‘Czech School Inspection’은 체코 공교육 내에서 글로벌 및 개발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한 첫 번째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이슈는 체코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육의 질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았다(GENE, un-published).

4. 아일랜드(Ireland)

아일랜드의 개발교육(Development Education)은 유럽 내에서도 매우 모범적으로 손꼽힌다. 2012년 한국의 OECD 동료평가에서도 아일랜드와 핀란드의 개발교육을 사례로 삼아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OECD, 2012). 아일랜드는 2006년 ODA 증액 시기, ODA백서를 발간하며, 이 백서에서 아일랜드 모든 아이들이 개발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박수연, 2015). Irish Aid의 체계적인 중기전략 하에 개발교육을 실시해 아일랜드는 이미 1, 2차 개발교육 중기전략을 마치고, 현재 3차 개발교육 전략을 수립하여 실시 중이다(GENE, 2016).

2016년 아일랜드의 ODA 예산은 6억 4,100만 유로로 GNP의 0.36%를 공여 중이며, 이 중 개발교육에 340만 유로를 배정하고 있다. 즉, 아일랜드의 ODA의 0.53%를 개발교육에 배정하고 있다. 이 개발교육 자금 중 52%인 177만 유로를 ① 개발교육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아일랜드 개발교육협회(Irish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IDEA), ② 초등 예비교사 교육에의 개발교육 통합을 지원하는 The DICE Project, ③ 초등 이후의 학교(post-primary school)에서의 학생과 교사들의 개발교육에의 참여를 지원하는 Irish Aid World Wise Global Schools Programme (WWGS), ④ 비정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생들의 개발교육을 지원하는 SUAS, ⑤ 개발교육 교육 자료를 온라인에 모아둔 Developededucation.ie 등 5개 우선순위 프로그램에 공여하고 있다(GENE, un-published).

5. 룩셈부르크(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DA/GNI 1% 목표가 재설정될 정도로 개발협력에 강력한 정치적,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개발협력은 룩셈부르크 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2017년 ODA 예산은 약 3억 6,400만 유로였으며, 이 중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에는 약 0.64%가량인 235만 유로가 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MFEA는 2016년 하반기에 예산 여유분이 존재하여 DEAR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대한 2차 지원 신청을 받아 2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였다. 이 중 하나는 10개 NGOs와 10개 NGOs 협의체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으로 개발교육을 글로벌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GENE, un-published).

6. 네덜란드(Netherlands)

네덜란드는 오랜 개발교육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모두에서 개발교육이 잘 반영되고 있다. 개발교육과 정보에 사용하는 자금의 양이 OECD DAC 국가 중 상당히 높은 편이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개발교육 지원 자금 담당 기관인 NCDO를 보유하고 있다(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5).

네덜란드는 ‘#Onderwijs2032’라는 플랫폼 주도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2020년 이후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개발교육을 주도적으로 시행 중인 NCDO 재단을 포함한 #Onderwijs2032 플랫폼을 통해 시민교육과 개발교육(Civic and Global Education)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교육부에 제공하였으며, 교육부 장관인 Mr. Sander Dekker는 이 자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GENE, un-published).

7. 폴란드(Poland)

폴란드에서는 개발교육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외교부, 교육부, 환경부, 교육개발센터, 폴란드 NGOs 협의체 대표들이 모여, 각 기관의 개발교육 활동 및 개발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폴란드는 이러한 부처 간 단순 논의 수준을 넘어서서 ‘Global Education 2016’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총 62만 3,904 유로 규모의 본 사업에는 폴란드 외교부, 교육부, 과학고등교육부가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NGOs, 대학, 연구소, 지방정부 등이 연계하여 폴란드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 모든 영역에 개발교육을 확산하여, 세계의 불평등과 세계 상호연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GENE, un-published).

8. 포르투갈(Portugal)

포르투갈은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1개 개발 NGOs에 14개의 새 프로젝트에 지원 자금을 공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들은 개발교육 연구, 공정무역, 대안적 경제, SDGs, 환경, 청소년과 글로벌시민권, 사회적 연대 경제, 관광과 글로벌시민,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이주민과 난민, 지역과 글로벌 발전, 개발협력, 식량안보, 식량권 등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보유하고 있다(GENE, un-published).

9.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로바키아 외교유럽부(Ministry of Foreign and European Affairs)가 개발교육 정책, 금액 할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Slovak Development Agency(SAIDC)는 개발교육 사업 계약, 감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도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 프로젝트 당 최장 지원 기간은 25달이며, 최고 3만 5천 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슬로바키아의 2016년 개발교육 지원 자금은 14만 유로로 전년 대비 1만 유로가 증가했다. 최근 슬로바키아 NGO들은 이민 이슈를 개발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소수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그룹들이 난민에 대한 공포와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미디어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는 데 반하는 활동이다(GENE, un-published).

IV. 한국 개발교육 현황과 과제

OECD 주요 국가들이 국제개발을 시작한 지 한참 뒤에 한국이 후발주자로 국제개발에 참여한 것처럼, 개발교육에서도 한국은 후발주자이다. 하지만, 발전 양상을 보면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영국 개발교육 역사에서 보여준 개발교육 발전 역사와 같이, 한국도 국제개발협력 현장을 다녀온 봉사자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개발교육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말엽에 실시된 KOICA의 민간단체 이해증진사업의 영향으로 NGOs에 의한 개발교육 교재 편찬, 교육 확대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이 시기 한시적으로 시민사회의 개발교육이 확대되었다. 이후 2012년 UN 반기문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발족과 2015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이 또 한 번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개발교육, 세계시민교육, 지구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현재 30여 개가 넘는 NGOs가 개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 현황과 관련해서는 한국 공교육 및 개발 NGOs의 글로벌시민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고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 현황에서는 본 글에서는 간략히 소개하고, 이 장에서는 KOICA 개발교육 활동 및 협력 현황,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교육 현황

1) KOICA의 개발교육 현황

KOICA의 경우, 산발적으로 초중고교 방문 강의인 국제개발협력 특강을 실시하고, 1998년부터 초중고 국제개발협력 글짓기 공모전을 실시해왔으나, 2009년 ODA교육원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 연령 대상의 다양한 개발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KOICA아카데미 산하 ODA교육원에서는 현재 일반인, 사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교원연수, 중소기업 맞춤형교육,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초중고교생을 위한 미래세대교육, 강사 양성교육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원연수는 2012년 기본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하였고, 2016년에는 국내 최초의 교원 대상 온라인 세계시민교육과정인 ‘KOICA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과정을 시공미디어와 함께 개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교원 전문 NGO인 (사)HoE와 함께 교원연수 심화과정을 개발하여 실시 운영 중이다.

글짓기공모전과 국제개발협력 특강의 지속적인 실시 외에도 2013년부터 6차시의 체계적인 초중고 동아리 글로벌시민교육과정인 ‘미래세대 ODA리더 개발교육’을 개발하여 현재 KCOC, 기아대책, 아름다운 가게, 월드비전(World Vision), 월드투게더(World Together), 코피온(Copion), 호이(Hope for Education, HoE)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 중이다. 2016년부터는 미래희망기구와 공동으로 세계시민교육과정을, 2017년부터는 성남시 평생학습원과 성남시 내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중심으로 한 공동교육인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교육 내에서 교육에의 수요 증가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다수의 글로벌시민교육 강사가 필요하게 되어, 매년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WFK) 귀국봉사단원 및 KOICA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세대 교육 강사를 신규 선발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발교육 기관들의 네트워크 및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개발교육(글로벌시민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 중이며, 2016년 세미나에서는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등의 개발교육 실무자를 초청하여 각국 사례를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초중고교(수요)와 개발 NGOs(공급) 간의 브릿지 역할을 위해 국내 33개 기관의 교육 활동을 담은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교육 안내 브로셔’를 2016년 개발하여 매해 개정하여 및 배포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세계시민 초등편, 중등편, 고등편,’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세계시민 첫걸음: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 등 개발교육 교수법과 사례집, 개론서, 교보재 등 교육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개발·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 KOICA 『글로벌시민교육 중기전략(2017-2021)』을 수립하여 본 전략하에 KOICA의 글로벌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성장·발전시켜나가고 있다.

KOICA 내에서 개발교육을 시행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관은 지구촌체험관이다. 지구촌체험관은 △타 문화권의 역사·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전시관람 프로그램, △전시 대상국과 해당 대륙이 품고 있는 환경, 인권, 평화, 다문화 등의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토의, 게임, 만들기, 가족 예술 작품 제작 등을 시행하는 글로벌시민교육, △전시 대상국의 대표 음식 만들기 체험 및 음식 먹어보기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부터 가족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시민교육을 시행 중이다. 또한, 그간 지구촌체험관에서 직접 개발하여 진행한 글로벌시민교육 교안을 모아 ‘글로벌시민교육’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전시 대상국 이주민 초청 문화 강의, 지역아동센터 글로벌시민교육 초청 교육 등 지역연계 CSR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니어

자문단이 파트너국 현장에서의 경험을 들려주는 교육, 글로벌시민교육 프로젝트를 스스로 기획하는 청소년 서포터즈, 전시대상국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바탕으로 진로 활동을 하는 청년 도슨트, 교육 자문을 위한 학부모 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구촌체험관, 미간행물).

KOICA는 본 교육의 지방교육 확산을 위해서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50-60년대에 개발 NGOs를 중심으로 개발교육이 시작된 후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각 지역에 개발교육센터들이 생겨나서 지방의 개발교육이 본격화되었던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개발 NGOs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교육이 시작된 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격차 문제가 부각되며, KOICA를 중심으로 강원, 경기, 대구, 인천, 전북, 제주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센터 및 KOICA 부산센터 중심이 되어 지방의 개발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지구촌체험관은 개발교육 사각지대인 전라남도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시민교육 꾸러미를 제작·배포하여 지리적 교육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ODA교육원은 2016년 특별히 교육 수요가 낮았던 지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교육청 방문협의를 통해 지방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추후 각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지원하고자 한다.

2) 한국 개발교육 현황

앞서 언급한 정부 기관인 KOICA 외에도 많은 주체들이 개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발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개발교육을 시행하는 시민사회 및 국내 소재 국제기구의 수는 30여 개가 넘는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기아대책, 코피온, KCOC, YMCA 등과 같이 개발교육 분야에서 비교적 오랜 역사를 보유한 곳도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에 새롭게 개발교육 분야를 시작한 기관도 많다. 현재까지 KOICA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글로벌시민교육을 포함하여 개발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NGO 및 국제기구 등 민간기관은 아래와 같다.

〈표 2〉 한국 개발교육(글로벌시민교육) 실시기관

1	고앤두	18	월드비전
2	국경없는의사회	19	월드투게더
3	국경없는 교육가회	20	위드
4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1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5	국제백신연구소	2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6	굿네이버스	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7	기아대책	24	유니세프한국위원회
8	더브릿지(The Bridge)	25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9	미래희망기구	26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10	발전대안 피다	27	지구촌나눔운동
11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MIZY)	28	코피온
12	세이브더칠드런	29	팀앤티
13	아름다운가게	30	프렌드아시아
14	아름다운커피	31	한마음한몸운동본부(카리타스 서울)
15	아이브릿지(ibridge)	32	휴먼인러브
16	아프리카인사이트	33	호이(HoE)
17	온해피		

출처: KOICA (2017)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교육 안내”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이 한국발 교육 의제가 되면서, 교육부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교육부 및 다양한 시도교육청이 본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히 서울, 인천, 경기, 강원 4개 시도교육청이 연합으로 세계시민교육 교과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현재 진행 중인 교과서 개정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이 보다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국책연구소 중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이 본 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별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년부터 OECD 국제학업성취도(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PISA)에 글로벌시민성을 다루는 Global Competency가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 중이다.

2. 협력 현황

1) 정부-시민사회 협력

2008-2009년 KOICA 내에 한시적으로 시민사회 대상 이해증진사업이 실시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학교 대상 이해증진사업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그 후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개발교육 관련 협력은 부진하였으나 2015년 세계교육포럼을 전후로 국내에 글로벌시민교육이 부상하면서, 이러한 협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도교육청은 KCOC,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월드비전 등의 NGOs들과 초·중고 교육, 교원연수 등에 협력하고 있으며, KOICA의 경우도 기아대책, 미래희망기구, 아름다운가게,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코피온, KCOC, HoE 등의 기관들과 초·중고 교육, 교원연수, 교재 제작 등에 협력하고 있으나, 유럽에 비하면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2) 교육계와 개발계 간의 협력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세계인’이라는 인간상을 지정해왔으며 (고мина, 조철기, 2010),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도 세계시민이 강조된다고는 하나, 효과적으로 공교육 내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에 본 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계와 개발계 간의 협력은 굉장히 미진한 실정이다. 미약하게나마 최근 교육계와 개발계가 모두 글로벌시민교육에 관심이 폭증하며, 실행 차원에서 협력이 시작되고 있으나, 본질적인 협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협력의 부재로, 실제 UN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한 본질적인 이유인 SDGs가 공교육 내로 확산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공교육 내 개발교육 확산을 위해 외교부, 교육부, 정부원조기관, 시민사회가 협의하는 장을 만들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은 현재 이런 채널이 전무한 상태이다. 유일하게 교육부, 외교부, KOICA, EDCF 등이 모여 개발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던 부처 및 정부 기관 간 협의체가 국무조정실 내의 이해증진 T/F였는데 본 T/F가 홍보 T/F로 회귀하면서, 현재 개발교육을 위한 논의의 장은 부재하게 된 문제가 있다.

3) 한국-국제사회 협력

개발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다. KOICA가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개발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2016년 KOICA에서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개발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바가 있다. 또한, 2016년 처음으로 KOICA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센터가 GENE 원탁회담(roundtable)에 비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본 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글로벌프라자(Global Plaza)가 KOICA ODA교육원과 지구촌체험관과의 방문협의를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물꼬가 조금씩 터지고는 있으나, 정기적으로, 심도 있게 국가 간 협력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물론 GENE 35차 원탁회담(roundtable)에 한국이 비유럽, GENE 비회원국으로서는 처음으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로 초대받아 참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이를 넘어선 구체적인 협력과 상시적인 협의의 장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예산 및 인력 현황

한국 개발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이다. GENE은 지속적으로 매해 열리는 원탁회담(roundtable)과 동료평가를 통해서 각국의 ODA 대비 개발교육과 이해증진 자금 현황을 조사하며, 이 수준을 UNDP의 권고 수준인 ODA 대비 3%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격려하고 있다(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5).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의거하여 많게는 벨기에처럼 380억 원가량을 연간 개발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벨기에의 경우도 총 ODA 예산 중 1.63% 정도로 국제사회 권고안인 3%에 못 미치는 숫자이다.

‘20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의하면, 2017년 한국 ODA 예산 규모는 2조6,359억 원으로 국제사회의 DEAR/ODA 3% 권고안에 따르면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79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KOICA 만을 때어보았을 때에도 KOICA 2017 예산 6,304억 원 중 189억 원 가량을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 2016:5:30). 하지만 실제 KOICA 안에서 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ODA교육원 예산은 연간 17억 원 남짓한 수준이며, 이 중 순수한 개발교육 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금은 이보다도 훨씬 작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제 등을 구축하기 힘든 예산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인력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을 주요 사업으로 인지하지 않으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다 보니, 보유 인력 수도 축소되어 KOICA ODA교육원의 경우, 업무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2011년과 비교해서 현재의 KOICA 실무직원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 당장 닥친 행정업무를 감당하는 것 외에 혁신적이거나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는 비단 KOICA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사회 개발교육 지원 자금의 부재는 곧 시민사회 내의 개발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직결되어, 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V. 제언

이 장에서는 유럽 각국의 사례와 한국 현황에 분석에 따른 국내 개발교육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개발교육 예산 및 인력 확대와 정책적 우선순위 강화

앞서도 말했듯이, 한국은 실제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에 충분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간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은 연구, 평가와 더불어 국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협력증진 예산으로 묶여 있어 주된 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예산 증액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유럽 원조공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민사회 개발교육 지원 자금 시스템이 KOICA에는 부재한 상태이다.

예산보다 더 큰 문제는 인력이다. KOICA에서 개발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ODA교육원의 경우 KOICA 실무직원 수는 현저히 적으며, 타 국제협력증진 예산 항목에 묶인 소위 타 ‘지원부서’의 인력과 비교하였을 때도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이 ODA 증액 시기에 1차적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이렇게 체계적인 개발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경제 위기하에서도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 국민들로 성장한 것이다. 개발교육은 또한 전문인력 양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개발교육과 이해증진은 길게는 그 국가의 ODA 규모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더 이상 지원사업의 하나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처럼 정책적 우선순위의 주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

2.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개발교육 자원 자금 시스템 구축

유럽 대다수의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발교육에 대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시민사회 간 견고한 협력체계이다. 벨기에 등 다수 국가들의 OECD DAC 동료평가에서 개발교육 및 이해증진에 대한 평가의 주요 잣대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수준에 있었다. 올해 6월에 있었던 한국 대상의 2016 OECD DAC 동료평가의 홍보와 이해증진 세션에서도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심사단이 한국 측에 중요하게 던졌던 질문 중 하나가 개발교육과 관련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 여부였다. 유럽을 포함한 선진원조공여국들은 시민사회를 개발협력 뿐 아니라 개발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지하고 접근하고 있다. 한국에서 KOICA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시민사회 간의 개발교육 협력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의 협력 수준과 규모는 미비하다.

특별히 유럽과 비교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개발교육 지원 자금 시스템의 부재이다. 정부 차원에서 제공되는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의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개발교육을 발전·확산시키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부재하여 시민사회 개발교육의 질적·양적 제고에 한계가 존재한다.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벨기에의 경우, 개발교육 예산의 80%를 시민사회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교육 시행기관이 80여 개에 이른다. 슬로바키아의 경우 최장 25개월까지 장기적으로 개발교육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자금 시스템은 특별히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 유럽 개발원조기관들은 이러한 지원 자금 시스템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개발 NGOs의 교육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부 중심의 교육, 교육의 비전문성, 기관 간 교육의 중복 문제 등은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제와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양질의 개발교육을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기관들의 개발교육을 모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시민을 양성하는 본질적인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원 자금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포르투갈과 벨기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주제의 교육들이 발굴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 기관별 교육의 주제들이 확립된 후에는 국가적으로 취약한 주제 혹은 강조되어야 하는 주제를 차기 년도의 개발교육 지원 자금 공모사업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그 주제의 교육이 개발되어 전파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협력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통합 통계 시스템의 문제이다. SDGs 4.7의 핵심 지표로 글로벌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통계 실적을 UN에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를 위한 통합 통계 시스템이 부재하다. 개발교육 지원 자금 체계와 이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러한 통합 통계 시스템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체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계와의 협력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의 개발교육 통계치 취합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개발교육 관련 부처 간 협력 강화

유럽 개발교육은 국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흐름이 바로 개발교육과 관련한 부처 간 협력이다. 다수의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GENE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정부 부처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발교육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서는 특별히 외교부, 교육부, 정부원조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별히 글로벌시민교육의 정규교과 및 비정규교과를 통한 공교육 내 확산에 있어 개발계와 교육계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은 정부원조기관, NGOs, UN에 그 핵심적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외교부, KOICA, 개발 NGOs 등 개발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본 교육의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부와 환경부가 각각 통일교육 및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간 협력에 대한 시작점으로는 국무조정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2014년 홍보 테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의 명칭을 이해증진 T/F로 변경하고, 유럽 국가들처럼 홍보라는 협의의 개념이 아닌 이해증진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을 변경하여, 홍보와 개발교육 두 축의 확대와 부처 간 협력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다(박수연, 2015). 이것이 2015년부터 다시 홍보 TF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축소되었는데, 개발교육 및 글로벌시민교육의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관심과 위치를 고려하여 이를 이해증진 TF로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국무조정실, 미간행물). 이해증진의 큰 두 개의 축인 홍보와 개발교육의 효과적인 확산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해 교육부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외교부 및 KOICA, EDCF의 홍보 및 개발교육 담당자가 모여서 정책 방향 및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개발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방법의 다양화

1~3차 개발교육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초등교육부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간 아일랜드처럼, 개발교육 초창기인 한국이 1~3차 개발교육 중기전략을 수립 및 실천하며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상은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등 공교육 영역이다. 이는 2015년을 전후하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공교육 내 높아지는 수요로 인해 탄력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발교육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높은 공급과 수요,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 국가적 필요 상황들이 모두 궤를 같이하는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럽 사례를 단계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다차원적으로 활용해갈 필요가 있다.

공교육 영역 외에 집중해야 할 분야는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교육이다. 현재 글로벌시민교육이 특별히 각광받으며 높은 수요를 보이는 곳이 바로 국제고, 외교, 영재고 등 기존의 교육 수혜 계층이다. 정부 차원의 세심한 배려가 부재하다면, 자칫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의 효과성 이상으로 교육의 형평성 부분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의 지역 안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NGOs 및 국제기구가 수도권에 밀집하여 있으므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지방으로의 교육 우선 분배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1990년대 EU의 탄생으로 다문화 인구가 폭증하여 공교육 현장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 역시 글로벌시민교육의 주된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통일 시대를 고려하여 급증하고 있는 탈북민 역시 본 교육의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공교육을 통한 교육 확대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외에도, 미디어,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혜자들을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등 보다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타 교육과의 연계 강화

현재 유럽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은 환경, 인권, 아동, 빈곤, 공정무역, 문화다양성, 양성평등, 대안경제 등을 아우르는 엄브렐라 용어(umbrella term)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통일교육 등 타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과의 연계 강화는 다음과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이 자칫 다문화 인구를 타자화시켜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글로벌시민교육은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벗어난 지구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좋은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도 다문화와 글로벌시민교육 연계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사범대학 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for Teacher Education, AACTE)의 경우 다문화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을 연계한 교육 안내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김다원, 2010).

마찬가지로, 통일교육 역시 분단 세대들이 사망하고, 다문화인구가 늘어나며, 국제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민족공동체 의식이 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박성춘, 이슬기, 2016). 이러한 통일교육의 한계는 글로벌시민교육과의 연계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남북한의 다른 문화, 가치관, 생활방식을 고려할 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상호연계, 비판적 사고 등을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시민교육은 통일을 위해 남북한 모두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교육 간의 연계에 대해서는 연구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인 교육에서의 협력은 미비한 상태로,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담당기관 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상의 연계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6. 국제사회와의 개발교육 연대 구축

결국, 개발교육과 글로벌시민교육의 귀결점은 국가 간의 연대이다. 실질적인 글로벌 교류·협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되고 시행되는 개발교육은 실상 상상에 기반을 둔 소설에 불과하기 쉽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발교육(글로벌교육)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교류·협력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 교사, NGOs 실무자, 정책 실무자 전반에서 필요하다. GENE의 경우 2016년 처음으로 한국을 초청하며, GENE의 지평을 유럽 밖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의 일환으로 2017년 처음 실시된 GENE Global Education Innovation Award의 심사위원단 중 1명을 비유럽국가인 한국에 배정하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GENE의 열린 태도에 발맞추어, GENE과의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대상의 개발교육 동료평가와 국별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계획해볼 수 있다.

또한, GENE이 유럽 지역의 협력에 기반을 둔 것처럼, 한국도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에서 개발교육 연대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시행해갈 필요가 있다.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일본은 UN 지속가능발전교육의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의 선도국가였으며, 한국은 다수의 국제회의 석상에서 글로벌시민교육의 선도국가가 될 것을 공언한 적이 있다. 공교롭게도 두 교육이 SDGs 4.7의 핵심교육으로 포함된 바, 추후로도 양 교육을 향해 두 국가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두 국가 간의 교류·협력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VI. 나가며

힘의 논리와 정글의 법칙을 강조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이라고 하는 사회계약설에 근거한 주권국가 개념을 탄생시켰다. 주권국가의 탄생으로 국가 내 분쟁이 줄어들었지만, 국제정치는 여전히 힘의 논리에 우선한 현실정치에 의해 좌우되었고, 이는 결국 제1·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는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인류의 공존·공영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원조기관들을 만들었다.

UN의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국 등이 현실정치로 세계가 다시 과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국가 간 협력과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UN을 위시한 국제사회는 부단한 노력 끝에, 2000-2015년까지 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의 사회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MDGs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2016-2030년까지는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전 세계의 경제, 사회, 환경 전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 지구적 목표(global goals)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 이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45년 UN이 결성된 지 1년 뒤, 영국의 처칠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유럽연방(United States of Europe)의 꿈을 유럽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었다.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은 이러한 자유주의 이상에 기반을 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었고, 실제 가장 이 이상에 근거한 활동과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유럽은 1993년 EU를 탄생시키며, 유럽시민이란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역사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지구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큰 규모의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 유럽은, 국가 간 이동과 이민, 취업이 자유로운, 경제공동체이자, 유럽의회가 존재하며, 개발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국가 간 논의와 협의의 장이 존재하는 정치공동체를 이루어내었다.

SDGs 수립으로 전 세계가 자유주의의 이상을 향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이은 도발과 긴장 강화로, 현실주의 국제정치가 생생히 살아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표본이 되어 있다. 2017년 9월 초에 열린 제3차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EEC)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북중미에 존재하는 다자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에 부재함을 지적하며, 역내 국가들의 전력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것이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로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공동체로, 장기적으로는 다자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해나갈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호평을 받았다. 윈스턴 처칠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의 유럽을 꿈꾸었다. 극한의 대결구조 속에서 동북아시아 연합체를, 더 나아가 통일을 꿈꾸는 것이 1946년 윈스턴 처칠의 희망처럼 요원해 보여도 불가능한 미래는 아닐 것이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난 유럽이 당시에는 요원해 보였던 유럽연합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와 현재의 유럽연합을 이루고, 최종 목표지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역사의 교훈을 보며 우리 역시 미래의 그림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유럽이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하고, 자유주의에 기반한 공존·공영의 미래를 함께 일구어 나갈 미래세대를 개발교육을 통해 길러낸 것처럼, 오늘날의 대한민국 역시 체계적인 개발교육 (글로벌시민교육)을 통해 동북아공동체 및 한반도 통일 시대를 만들어갈 미래세대들을 육성해야 한다.

경쟁만을 가르치는, 그래서 현실주의 국제정치보다 살벌한 각자도생의 대한민국을 그리는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가 속한 사회가, 지역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그리고 고민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일이야말로 현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북아 다자협력체와 통일이 이상이나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극한의 현실주의의 폐허 위에서 지구상 가장 발전된 자유주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유럽의 기적이 이 땅 위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참고문헌〉

- 고미나·조철기. 2010. “영국에서 글로벌학습을 위한 개발교육의 지원과 지리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2):155-171.
- 고아라. 2015. “글로벌시민교육 교원 연수의 효과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0(1): 95-133.
- 국무조정실. 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세종: 국무조정실.
- _____. ODA 홍보 T/F '14년 1차회의 개최』. 미간행물.
- _____. 『ODA 이해증진 T/F '14년 2차회의 개최』. 미간행물.
- 김다원. 2010. “사회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문화 다양성’수업 내용 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6권 제2호:167-181.
- 김동호. “문재인 대통령 ‘세계시민상 Global Citizen Award’ 받는다.” 뉴스웍스 홈페이지 (2017.09.14. 보도).
-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738> (접속일: 2017.09.17.).
- 김영환·손미·김선영·이승진. 2014. “예비교사의 공적개발원조와 개발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교사교육연구』 53(1). 47-63.
- 박성춘·이슬기. 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 서울: 집문당.
- 박수연. 2014.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사례의 정책적 함의.” 『국제개발협력』.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_____. 2015. 『개발교육 이슈리포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박수연·이상백. 2013.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교육 이야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지구촌체험관. 『KOICA 지구촌체험관의 세계시민교육 소개』. 미간행물.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2017. 『세계시민교육 실시기관 교육 안내』.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 DEEEP. 2007. 『The 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Education & Awareness Raising』. Paris: European Committee.
- GENE. 2015. *Global Education in Ireland*. Amsterdam and Dublin: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 _____. 2016. *The State of Global Education in Europe 2015*. Dublin: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 _____. 2017. *Global Education in Belgium*. Amsterdam and Dublin: Global

Education Network Europe.

_____. *GENE National Reports Autumn Update 2016*. un-published.

Jon Danzig. “Winston Churchill: A founder of the European Union” posted on “Ideasoneurope, IOE” blog (November 10th, 2013), available at <http://eu-rope.ideasoneurope.eu/2013/11/10/winston-churchill-a-founder-of-the-european-union> (접속일: 2017.09.17.).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2005. *Global Education in Netherlands*. Lisbon: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GENE. 2006. *Global Education in Austria*. Lisbon: North-South Centre of the Council of Europe.

OECD. 2012.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eer Review 2012*.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외교부. “유럽연합(EU)”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countries/regional/eu/outline/index.jsp?mofat=001&menu=m_40_70_90 (접속일: 2017.09.17.).

GENE. “Welcome to GENE,” “Innovation Award.” posted on the official website of GENE, available at <http://gene.eu> (접속일: 2017.09.18.).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